

독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그리고 전환

Matthias Knuth (Research Fellow at Institute for Work, Skills and Training (IAQ),
University of Duisburg-Essen)

■ 머리말 : 2022년 말 독일의 경제 및 노동시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난 3년간의 여러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제재조치, 그리고 이 두 요인으로 인한 기존 공급관계의 붕괴를 겪은 2022년 말 현재, 독일의 노동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고용증가세가 팬데믹으로 일시 둔화되기는 했지만, 2022년 10월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2월보다도 많았다. 2022년 6월부터 실업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등록 구인건은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두 수치 모두 팬데믹의 여파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7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0년과 2021년 실업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던 단기노동의 비중은 현재는 낮지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은 설비투자과 개인소비가 뒷받침하는데, 개인소비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된 쇼핑 기회로 인해 추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 동안의 재정지원 조치들은 기업 도산을 단순히 지연시켰을 뿐 이제는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기업 도산은 2022년 상반기에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GDP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비해 2020년 봄 잠시 더 낮아졌다가 이후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로는 2022년 3분기에 이르러서야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고용 동향은 부진한 경제성장률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노동생산성은 정체된 상태이다.

2022년 구인건수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9월 평균 결원기간은 전년 동월대비 30% 길었다. 임박한 인구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은 숙련 노동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산가능연령 인구(20~66세)는 2022년 5,17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출산율이 증가하고 연평균 40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정도 규모의 이민 순유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국자 중 일부만이 국내에 영구 거주하기 때문에) 매년 150만 명이 새로 입국해야 한다. 2022년 신규 입국자는 150만 명에 육박했는데 1,6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100만 명이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군복무에 적합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출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국가에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지는 전쟁의 결과와 재건 속도에 달려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난민 중 3분의 1은 수년간 또는 계속해서 독일에 머물기를 원하며 또 다른 3분의 1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만 독일에 머물고 싶어 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응답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IAB et al., 2022). 따라서 우크라이나인의 이동에 따른 장기적인 인구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적 취업자 수는 현재까지 5만 명 정도 증가했을 뿐이지만 그 두 배에 달하는 수가 독일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독일의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독일의 집단적 기억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1923년의 고통스러운 경험¹⁾으로부터 백년이 지난 현재, 독일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르고 지냈던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은 팬데믹 기간에 벌어진 공급체인 붕괴와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 제재조치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있다. 잠정 산출에 의하면,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0%,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은 7.8%로 추산된다. 이러한 동향의 근본적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 부담은 전체 인구에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는데, 빈곤가구일수록 가계 예산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으며, 빈곤가구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은 부유한 가구보다 낮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봄 급감했던 대외 무역은 2022년에 2019년보다 훨씬 높은 수

1) 편집자 주: 바이마르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독일의 성장동력이었으며 유럽의 무역 상대국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독일의 수출 흑자는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와 해소되지 않은 중국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절된 교역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들이 반영되어 있다.

■ 임금동향 및 임금정책

실질임금을 보면 2014~2019년 동안 약간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단기적으로 인해 하락했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다시 감소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2022년 임금은 평균 2.7% 증가했지만, 실질임금 기준으로는 4.7%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산업 노조는 2022년 11월 향후 2년 동안 임금을 평균 4.2% 인상한다는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전통적으로 금속부문의 합의 내용은 다른 경제 부문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약 4% 임금인상은 2023년 물가인상을 보완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무상황이 양호한 기업이라면 중요한 추가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구제책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플레이션 보상 감면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이 노동자에게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는 특별 지급금 최대 3천 유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높은 임금인상률 타결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여름 정부, 사용자단체 및 노조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임금협상 타결은 다음 협상의 출발점이 되므로 항구적인 효과가 있지만 위와 같은 일시적 감면제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1일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2유로로 인상되었다. 이는 2021년 사회민주당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자 녹색당 및 자유당과의 연정 협정에서도 합의된 내용이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조가 동수로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정해지며, 위원회의 권고는 이미 체결된 여러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Knuth, 2019).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코포라티즘에 기반한 최저임금의

정당성에서 벗어난 조치였으며, 사용자단체들도 같은 비난을 했다. 그러나 결국 예외적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방대한 국가 원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이 던진 난제에 직면한 정치환경에서 최저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정치적 논쟁은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18%에 달하는 660만 명이 혜택을 받는데, 지역별로는 동독지역 노동자 중 29%, 서독지역 노동자 중 16%가 해당한다(Pusch and Seils, 2022). 이러한 수치는 동독과 서독지역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동독지역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기 때문이다(Ellguth and Kohaut, 2022).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내 인센티브 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누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겠는가?

■ 노동시장정책 개혁

광범위하게 변경된 노동시장정책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가장 크게는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그보다 수가 적은, 실업보험제도 보험료 재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실직자에 대한 훈련도 강화될 예정이다. 직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실직자에게는 기초보장급여에 더해 월 150유로가 지급된다. 또한 직업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기 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도 월 75유로의 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독일에서는 일자리가 있지만 자신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기초보장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 1인의 생계만을 감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은 주로 시간제 노동자나 자녀를 둔 외벌이 노동자이다. 경험적으로 미니잡 기준인 450유로(2022년 10월 1일부터 520유로로 인상) 미만의 소득자가 추가 지원금 신청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동소득에 따라 기초보장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적용된 규칙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상쇄를

위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향후에는 노동시간과 순소득(순노동소득과 상쇄 후 잔여 기본소득의 합산)의 비율을 보여주는 곡선이 더 안정적인 형태를 띠 것이다.

고용센터의 협조를 거부할 시 기초보장급여를 감액하는 형태로 부과하던 제재는 2005년 기초보장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시점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그 결과 2019년 연방헌법재판소는 허용 가능한 감액을 기본급여의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실직자가 고용센터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팬데믹 기간에는 제재 조치가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요건들은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초보장급여는 매년 해가 바뀌는 시점에 조정된다. 예년의 인상분은 몇 유로에 불과했지만 인플레이션 수당이 이른 시기에 지급되는 데다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1인당 월 기초보장급여는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현재 502유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부 및 자녀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도 인상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기타 집단에 대한 방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초보장급여 수급자들은 인상률이 비록 기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소폭 증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에너지 가격 위기 및 기후중립으로의 전환

2021년 12월 8일 독일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2022년 2월 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채택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재가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독일에 대해 직접적인 가스 공급을 감축하더니 결국에는 전면 중단했고, 2022년 9월 26일에는 발트해를 통과하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시간도 없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가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지 지연시킬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해야 할 동기가 된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승인 절차 속도를 높이고 발전소 건설 허용 지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는 환영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강했지만, 현

재 위기로 인해 정당성을 잃고 있다.

한편 에너지 위기에 따라 액화가스 수송 터미널 등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 건설이 불가피해졌다. 대체가스 공급원이 절박해지면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사실상 가스는 에너지원으로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오히려 사용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에너지 위기 전에 정했던, 발전을 위한 무연탄 및 갈탄 사용의 단계적 폐지 기한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석탄 사용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단계적 폐지 기한이 다가왔을 때 다른 연정이 독일을 이끌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팬데믹 이후 붕괴된 글로벌 공급체인과 전 세계 수요 증가로 인해, 풍력·태양광 발전 및 배급과 히트펌프 등 대체 난방 시스템에 필요한 부품 생산 및 조달이 차질을 빚게 된 것도 기후중립을 지연시키는 요소이다. 특히 기존 건물에 새로운 설비를 장착하는 일은 지극히 노동집약적인 일이며 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가 기능공 훈련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순수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적용되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 구입 지원금은 6천 유로에서 4,500유로로, 4만~6만 5천 유로 이하의 경우 5천 유로에서 3천 유로로 지원금이 줄어들며, 지금까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만 5천 유로 초과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 독일의 신규 자동차 등록 중 순수 전기차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였지만, 실제 독일 내에서 운행할 것으로 등록된 차량 중 순수 전기차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 배터리 구동 차량을 위한 공용 충전 네트워크 확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력 공급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 정부의 물가상승 대책 지원방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지원 및 구

제책을 마련하게 했다. 팬데믹과 전쟁은 매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은 사전에 구상된 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밝혀진 바와 같이, 독일의 연방체제 및 디지털화가 완성되지 않은 공공행정하에서 적시에 표적화된 방식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결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연방정부는 직접 주민들과 접촉할 방법이 없고 접촉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전할 수 없다. 연방법 집행은 주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 주는 자체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도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장기금만이 연방정부에 직접 보고된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팬데믹 또는 에너지 가격 급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온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 (1) 사회보장을 통한 방식
- (2) 재정행정을 통한 방식
- (3) 직접 신청
- (4) 가격 보조금을 통한 방식

연금수급자는 연금공단에서 에너지 비용 일시금으로 300유로를 받았고(1), 노동자는 동일한 금액이 포함된 월급을 받았다. 사용자는 이 금액을 소득세(기업에서 재정행정기관으로 직접 이전되는 노동자 소득세 선납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았다(2). 여전히 재직 중인 연금수급자는 일시금을 두 차례 받았다.

학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200유로를 받는데(3), 16개 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 글 작성 시점에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자리를 구해서 이미 300유로를 받은 학생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3년에는 가게 및 기업에 대한 에너지 비용 보조금이 대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4). 이 보조금은 전기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집을 두 채 소유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두 배로 받게 되며, 이전 에너지 소비량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큰 가게나 기업이 더 큰 보상을 받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혜택 대상이 적절치 못한 개입 조치에 투입되는 비용이 2천억 유로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되어 EU 내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EU 회원국은 에너지원 구입 시 적용되는 EU 차원의 가격 상한선을 통한 시장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가격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유럽이 충분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독일이 최고 가격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와중에 자신들은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결국 가격 상한선을 현재보다 높게 책정하여 극단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은 없도록 하는 절충안이 도출되었다.

■ 맺음말 : 2023년 전망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GCEE)는 2023년 GDP는 0.2% 소폭 감소하고 물가상승률 역시 약간 감소하여 7.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SVR, 2022). 더 최근의 전망은 조금 더 낙관적이어서 GDP는 0.1% 감소하지만 물가상승률이 6.4%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에너지 가격 인상 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들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정책들은 GCEE의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제활동 부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2022년에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전망한 EU 전체 및 유로존의 경제는 더 낙관적인데, EU 전체의 GDP 증가율은 0.3%, 물가상승률은 7%,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6.1%로 내다봤다.

출범 1년이 지난 독일 정부는 경기침체와 에너지 공급 부족을 모두 해결하는 동시에 물가상승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정부 지지율과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조치 유지에 대한 지지율 모두 꽤 안정적이다. 하지만 독일의 조직 및 디지털 인프라는 신속하고 표적화된 개입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개입 조치들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2023년 연정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 역시 국가부채에 대해 점차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부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우려와는 대조적으로 항상 부채를 해소하고도 남은 만큼 성장해왔기 때문에 부채가 문제시되지 않았었다. 즉 GDP가 증가할 때 GDP 대비 부채 규모는 감소했다. 게다가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금리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경제는 더 성장할 것인가?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더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할까? **ILL**

참고문헌

- Ellguth, P. and S. Kohaut(2022), “Tarifbindung und betriebliche Interessenvertretung: Ergebnisse aus dem IAB-Betriebspanel 2021”, *WSI-Mitteilungen*, 75(4), pp.328~336.
- IAB, BiB, BAMF and DIW(2022), “Geflüchtete aus der Ukraine in Deutschland: Flucht, Ankunft und Leben”, <https://www.bib.bund.de/> (2022.12.30).
- Knuth, M.(2019),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까?: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특징과 제도 변화의 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17(4), pp.35~50.
- Pusch, T. and E. Seils(2022), “12 Euro Mindestlohn. Auswirkungen in den Kreisen (WSI Policy Brief No. 72)”, <https://www.econstor.eu/> (2023.1.2).
- SVR(2022), “Energiekrise solidarisch bewältigen, neue Realität gestalten. Jahresgutachten”, <https://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2023.1.4).